

# 檢, 월성 1호기 압수수색... 與 “검찰의 국정 흔들기”

국민의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민주 이낙연 대표 “야당발 청구 수사”  
추미에 법무, 檢 특활비 감찰 지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과 검찰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추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 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과 직결되는 월성 1호기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 여론은 강하게 반발하는 형

국이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 법무부와 대검을 방문해 특활비 집행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검찰 특활비 문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대전지검의 강제수사와 맞물려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 관계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이 고발 2주 만인 지난 5~6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은 이를 ‘야당발 청구수사’로 규정하고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추 장관도 법사위에서 “야당의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하감”이라며 여당의 반

발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수사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8일 페이스북에서 “돌아가는 형세가 ‘정치인 윤석열’은 가망이 없어 보이고 ‘정치검찰 윤석열’로만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온당치 않은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며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월성1호기 원전과 관련해 산업자원부, 한수원, 가스공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

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라면서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면서 “마치 지난해 법무부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유감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절절한 표현이다. 이번 수

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다”면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위험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감사원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야당이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제출한 지 2주 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국검(국민의힘-검찰) 유착”, “야당발 청구수사”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고발 이후 14일 만에 검찰이 호응하는 식으로 야당발 청구수사가 이뤄졌다”며 “국민의힘과 검찰 권력의 유착, ‘국검 유착’에 따른 청구수사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세균 총리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광역단체장 사퇴자 공천 불이익 폐지

‘개인 선택권·당 선거전략 제약’ 공감대... 당헌·당규 예외 조항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출마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하던 공천 불이익 규정을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해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문제로 실시되는 내년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 8월 당헌·당규 개정과정에서 예외 조항을 만든 것으로, 애초 해당 규정을 도입한 정신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간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대선 제외)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 득표수의 25%를 감산해 왔다.

이 규정은 임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공약한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 출마를 위

해 중도 사퇴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 보궐선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만들어졌으며 2019년에는 감산 비율을 10%에서 25%로 대폭 올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8·29 전당대회를 앞둔 8월 19일 감산 대상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를 예외로 하도록 당규를 변경했다. 지난 4월과 7월 각각 부산·서울시장의 보궐선거가 확정된 이후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한 임기 중도 사퇴는 불이익 대상에서 뺀 것이다.

당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후보군에 현역 국회의원이 상당수 포함된 상황에서 25%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과 당의 선거 전략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규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여야, 공수처장 후보 인물난

대부분 고사... 최대 20여명 전망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보 물색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당 5명씩 최대 35명까지 추천할 수 있지만, 여권과 야권 모두 고사하는 이가 많아 15~20명 수준에서 추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9일 오후 6시까지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다. 여당 추천 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추천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1차 후보 추천이 마무리되면, 추천위원회는 13일 회의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한다.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후보로 지명할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연합뉴스

## 유시민 “사회 기득권층, 다른 견해내면 핍박”

알릴레오 시즌3...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도서비평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다수 여론이 찬성하는 쪽과 다른 견해를 내놓는 사람을 핍박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6일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 (알릴레오 북 s)에서 “그 사람이 인격에 하자가 있는 양,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 양 막말, 망언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서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의사 표현을 할 때 눈치 보게 만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알릴레오 시즌3는 교양서를 다루는 도서비평 프로그램으로, 이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주제로 첫 방송 했다. 유 이사장은 ‘자유론’ 속 한 문장인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사람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한 사람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다’는 문장을 소개하면서 “아무런 반대, 도전이 없는 통설은 아무의

미가 없게 돼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생각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성장하며 가지게 된 생각이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어떤 견해를 말할 때 사회에서 오는 압력이 무서운 것”이라고도 했다. 유 이사장은 “국보법(국가보안법) 같은 것은 자유론에 비춰보면 존재해서는 안 될 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주승민 변호사가 “소수의견이 어떤 해로운 생각을 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자 유 이사장은 “일베류의 저런 것’도 표현의 자유로 용납해야 하는가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호응했다. 그는 이번 시즌을 책 비평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이런 것 하셨을 것 같다”며 “꺼져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셨었는데, 꺼져있고자 하는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책”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민형배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법 대표 발의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기념일 제정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8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희생된 윤상현 대변인과 ‘불뚝아학’ 박기순 님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2008년까지 5·18 기념식에서 제창되었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제창을 식순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5·18 단체와 유가족들이 별도의 기

념식을 개최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민형배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40년이 지난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노래가 되었다. 유

가족과 지역 주민, 사건 경험자와 미경험자 모두에게 희생위령, 정신계승의 의미가 있다”며 “법 제정을 통해 기념일과 기념식에 제창되어 기념·추념의 뜻을 더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념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의료광고심의의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